

국정조사 합의 불발...여 “수사가 우선” vs 야 “정부 못믿어”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주호영 “지금은 논할 단계 아니다”

박홍근 “계속 거부면 요구서 제출”

여야 원내대표가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포스트 추모 정부에서 '정부 책임론'을 지렛대로 주도권을 잡아간다는 계획인 반면 여권은 '정쟁론'으로 야권의 공세에 맞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 의장께서는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으론 아직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전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봐가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이나 범위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국정조사는 요구서 제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그 상태에서 지체 없이 국정조사 개최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입법 취지가 국정조사를 가급적 하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 더 기다려보고 (국민의힘을) 설득 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고 반대한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상 의장도 이 절차를 계속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비공개 회동에 앞서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

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며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해 달라"고 여당에 요구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필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부족한 게 있을 때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압사 참사' 국가에도기간이 끝나자 여권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애초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주장해 온 민주당은 특별검사(특검) 도입 카드까지 꺼내며 '쌍끌이'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규모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경고하는 보고서가 작성됐는데도, 용산경찰서가 이를 목격한 데 이어 참사 후 보고서가 삭제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나섰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이명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즉각적인 파면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윤석열 정부 내각 전체를 겨냥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 윤 청장 파면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내각을 전면 쇠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고리로 여권을 수세로 몰아가 국정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를 민주당이 '정쟁화'하고 있다며 총력 반격에 나섰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가 윤 대통령 퇴진 시위로 이어진 배경에 민주당의 조직 동원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주말 집회에 이재명 대표 지지 인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 '이십민심'에서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 참가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민주당과의 연결 고리를 부각시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무더기 버스 동원에 나선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치졸한 정치를 당장 그만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고 수습과 무관하게 과도한 정쟁을 벌이고 국민 분열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 “이태원 참사 특검 논의할 때 총리 사퇴 등 전면적 국정 쇠신 필요”

“국민 안전 예산 만들기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열린 최고 위원회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대한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 종료와 함께 민주당의 국정조사 드라이브 추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특검 도입까지 언급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 여러분과 희생자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국무총리 사퇴를 포함해 국정의 전면적 쇠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책임을 지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참사 희생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라며 "오로지 국가의 잘못이다.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 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본격화한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국민이 주권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가계·기업 부도를 막고 국가 부도의 위험을 관리하는 '3대 부도 방지 예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히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안전 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용산 경찰·소방·구청 기관장 ‘업무상 과실치사’ 전원 입건

행안부 등 수사 확대 가능성

보고서 조작·삭제 의혹도 수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용산지역 경찰·소방서장은 물론 구청장까지 일제히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이번 참사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이들 지역 기관장은 물론 경찰 지휘부와 서울시·행정안전부 등 뒷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후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한 데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고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보고를 작성한 상황실 직원을 이날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 소방서장의 경우 참사 발생 당시 경찰과 공동 대응 요청을 주고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이태원 일대 인파 밀집을 제대로 예측하고 유관기관 협의 등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법령상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 중"이라고 말해 '뒷선'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특수본은 또 용산경찰서의 헬리콥터 측재 관련 정보보고 문건이 참사 이후 삭제됐고,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회유가 이뤄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용산서 정보관들은 헬리콥터를 앞두고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다수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추가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첩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는 내부 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72시간 안에 삭제된다.

특수본은 이날까지 각종 매뉴얼 등 현물 611점과 녹취파일 등 전자정보 6521점, 휴대폰 2대 등 총 7134점을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가을철 산행 시 화기물 소지하지 않기

산불 조심기간 11.1.~12.15.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산림을 지켜요!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